

EU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및 시사점

Child Care Support in Selected EU Countrie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각 국가마다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U 국가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EU 국가에서 가족 지원 정책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서 현금 급여나 조세 감면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금 지원 정책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현물 지원으로서 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이다. 대부분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족의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세 감면이나 현금 급여의 형태로 지원되기도 한다. 셋째,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와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 정책이다. 산전후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자녀 돌봄 휴가 등이 포함된다.

본 고에서는 현금 급여,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가족 돌봄 휴직 정책의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EU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Eurostat 사회보호지출 데이터베이스(ESSPROS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EU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양육 지원 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한다.

2. EU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ESSPROSS는 EU 국가의 사회보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지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1970년대 Eurostat와 EU 회원국들과의 협력하에 개발되었다. ESSPROSS의 방법론은 1981년 최초로 발행되었으며 1996년에 개편을 거쳐 2008년에 세부

적인 수정이 있었다. 동 데이터 베이스의 장점은 첫째, 자료간의 우수한 비교성으로서 정확하고 검증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둘째, 정기적인 데이터 생산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경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포괄적인 국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현재 30개 EU 회원국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ESSPROSS는 다음의 8가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질병/보건의료, ② 장애, ③ 노인, ④ 긴급지원, ⑤ 가족/아동, ⑥ 실업, ⑦ 주거, ⑧ 사회적 배제 및 기타이다. 이 중에서 “가족/아동” 정책에 대해 “현금이나 현물(보건의료 제외) 지원 정책으로서 임신, 출산, 입양, 자녀 양육, 기타 가족 돌봄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¹⁾”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항목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정부 정책이 포함된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책, 둘째, 자녀 이외 친인척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 보조 정책, 셋째, 가족 특히 자녀를 돌봐주고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고안된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ESSPROSS는 다양한 유럽 국가의 가족·아동 급여 지원 정책을 아래의 카테고리에 따라 구분하였다. 현금 급여는 아동 양육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가족수당 및 아동수당이 포함되며,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휴직할 경우 지급되는 휴직 급여 혹은 양육수당이 포함된다. 현물 급여는 주로 보육 관련 서비스 지원으로서 시설 서비스와 보육도우미에 의한 개인 서비스가 포함된다.

그러나 ESSPROSS가 제시한 가족지원정책의 정의를 근거로 각국의 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표 1. ESSPRO의 가족·아동 급여 지원 구분

구분	종류	비고
현물 급여	보육 시설 서비스	현물 혹은 서비스 지원
	가정 입주 보육 서비스	
	가정 방문 보육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현금 급여	출산 관련 소득 보전 급여	가족 돌봄 휴가시 급여 지원
	출산 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 (자녀 양육 비용 보상)
	가족수당·아동수당	
	기타 현금 급여	

자료: EU (2009) “The costs of raising children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o support parenthood in European countries: a Literature Review”

1) EU(2009) “The costs of raising children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o support parenthood in European countries: a Literature Review”

되고 있다. 아동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출되는 몇가지 항목이 가족·아동 정책이 아닌 사회부조 정책안에 포함된 것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육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가정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현물 급여 안에 누락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분도 “서비스 현물”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에 따라 취학전 학교 프로그램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국가가 있는데 이러한 취학전 학교 프로그램이 보육 서비스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 정책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가족 수당이며 같은 현금 급여라 하더라도 여성의 자녀 출산 혹은 양육에 따른 기회 비용 보상의 개념으로 지원하는 육아 휴직 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현금 급여의 다른 형태인 조세 감면 정책은 현금 급여 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한다. ESSPROSS 데이터에서 현금 급여에 포함하고 있는 정책은 보편적인 형태인 아동 수당 및 가족 수당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 수당과 장애아 수당도 포함하고 있다.

EU 국가에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아동 수당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다. 반면에 체첸,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 국가마다 다양하

다. 스웨덴은 16세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과 룩셈부르크에서는 27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셋째, 거의 절반에 가까운 EU 국가들에서 기본적인 아동 수당 급여 액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다. 넷째, 아동 수당 급여액수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며 가장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는 유럽 대륙 국가로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이다. 낮은 수준의 아동 수당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 유럽 국가와 동구권 국가 그리고 중앙 유럽 국가들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 수당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예외적인 사례로서 프랑스에서는 자산 조사에 근거한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가지 종류 이상의 가족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수당의 유형에는 다자녀 가족 수당, 한부모 가족 수당, 장애아 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가들 간의 가족 수당을 비교함에 있어 다른 유형의 가족 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한 종류만의 가족 수당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국가 가족 수당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3. EU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부 지출 현황

ESSPROSS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EU 국가가 2005년도에 가족·아동 정책에 지출한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가족·아동 급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여 2005년 현재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서 전체 GDP 중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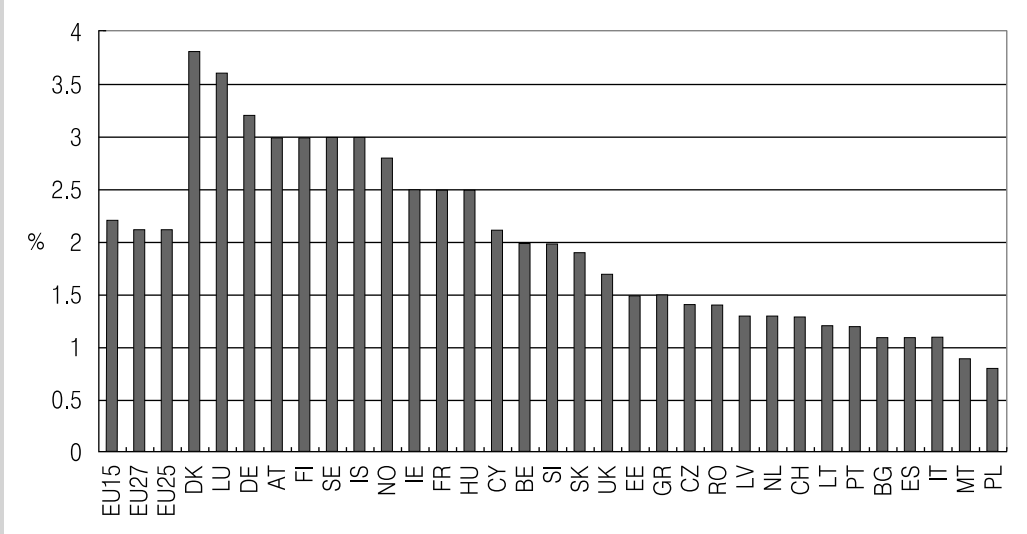
장 낮은 국가는 폴란드로서 0.8%를 차지하고 있다. EU 국가 평균으로 보았을 때 가족·아동 급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총 사회 지출에서 가

표 2. EU 국가의 가족 및 아동 지원 정책의 지출 규모 (GDP 대비): 2005년

구분	GDP 대비	사회지출 대비	보편적 급여	자산조사에 따른 급여	현물급여	육아휴직급여	기타현금급여
EU 27개국	2.1	7.7	1.5	0.6	0.6	0.3	1.2
EU 25개국	2.1	7.7	1.5	0.6	0.6	0.3	1.2
EU 15개국	2.2	7.7	1.6	0.6	0.6	0.3	1.2
벨기에	2.0	6.9	2.0	0.0	0.4	0.1	1.6
불가리아	1.1	6.6	0.5	0.6	0.1	0.4	0.6
체코	1.4	7.3	0.9	0.5	0.2	0.6	0.6
덴마크	3.8	12.6	3.6	0.2	2.2	0.5	1.0
독일	3.2	10.8	2.2	1.0	0.8	0.2	2.2
에스토니아	1.5	12.0	1.5	0.0	0.1	0.7	0.7
아일랜드	2.5	13.6	1.6	0.8	0.3	0.1	2.1
그리스	1.5	6.3	1.1	0.5	0.5	0.3	0.7
스페인	1.1	5.5	0.8	0.3	0.7	0.2	0.2
프랑스	2.5	8.0	1.6	0.9	0.5	0.4	1.6
이탈리아	1.1	4.2	0.7	0.4	0.5	0.2	0.4
키프로스	2.1	11.6	2.1	0.0	0.2	0.1	1.8
라트비아	1.3	10.6	1.3	0.0	0.2	0.6	0.5
리투아니아	1.2	9.0	1.1	0.1	0.4	0.3	0.5
룩셈부르크	3.6	16.5	3.6	0.0	0.5	0.4	2.7
헝가리	2.5	11.5	2.3	0.3	0.6	0.6	1.3
몰타	0.9	4.7	0.1	0.7	0.1	0.0	0.8
네덜란드	1.3	4.6	1.2	0.1	0.7	0.0	0.6
오스트리아	3.0	10.4	2.8	0.2	0.5	0.1	2.4
폴란드	0.8	4.3	0.2	0.6	0.0	0.2	0.6
포르투갈	1.2	5.0	0.2	1.0	0.5	0.2	0.5
루마니아	1.4	10.0	1.2	0.2	0.2	0.6	0.7
슬로베니아	2.0	8.4	0.6	1.4	0.6	0.4	1.0
슬로바키아	1.9	11.0	1.9	0.0	0.1	0.5	1.2
핀란드	3.0	11.2	3.0	0.0	1.4	0.6	1.0
스웨덴	3.0	9.5	3.0	0.0	1.5	0.7	0.9
영국	1.7	6.2	1.3	0.4	0.4	0.1	0.1
아이슬란드	3.0	13.6	2.4	0.6	1.7	0.6	0.7
노르웨이	2.8	11.9	2.7	0.2	1.3	0.7	0.9
크로아티아	1.3	4.4	1.3	0.0	0.2	0.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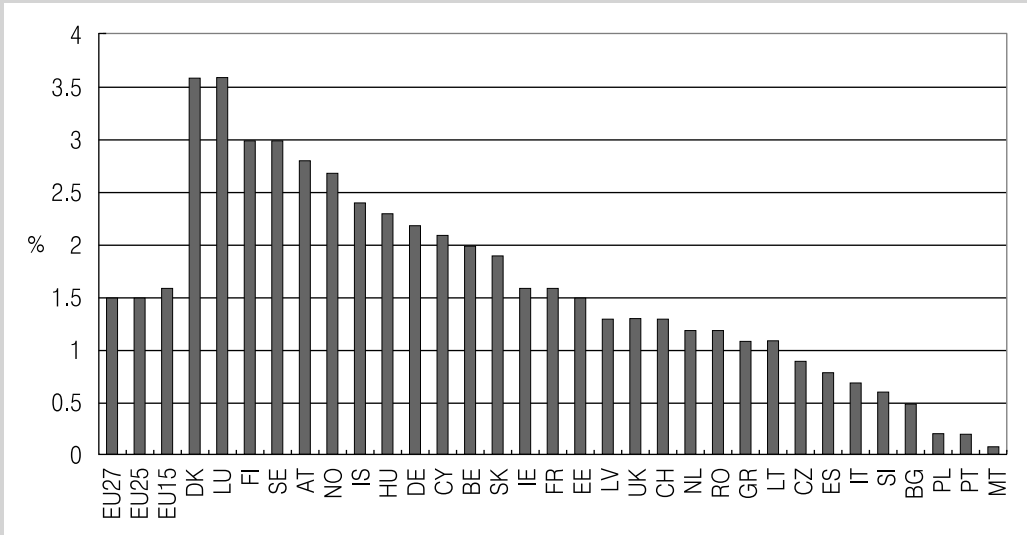
주: 육아휴직 급여에는 출산 관련 소득 지원 급여, 육아 휴직 급여, 출산수당이 포함됨
 자료: ESSPROS(Eurostat), EC(2009)에서 재인용

그림 1. EU 국가의 가족 및 아동 지원 정책 지출 비중 (GDP 대비): 2005년



자료: ESSPROS(Eurostat), EC(2009)에서 재인용

그림 2. EU 국가의 가족 및 아동 지원 정책 지출 비중 (총 사회지출 대비): 2005년



자료: ESSPROS(Eurostat), EC(2009)에서 재인용

족·아동 급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EU 국가 평균적으로 7.7%이며 국가별로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16.5%,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태리 4.2%이다.

현물 급여에 해당하는 아동 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U 평균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게는 덴마크 2.2%부터 거의 0%에 가까운 폴란드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구 유럽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현물 급여 형태로의 양육 지원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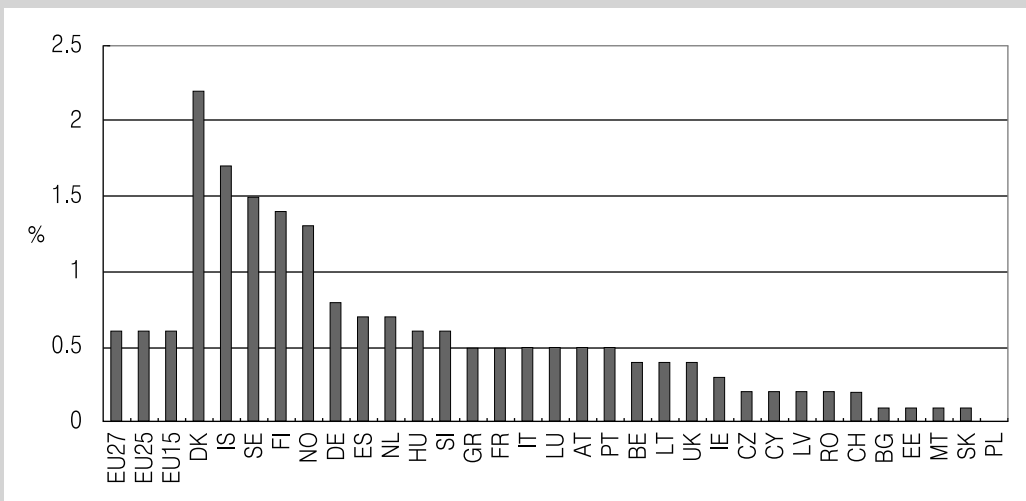
EU 국가 평균적으로 볼 때 가족·아동 지원 정책에 대한 지출에서 약 60%를 현금 급여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금 급여 지원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현금 급여 지원의 정도도 국가 마다 다양하여 룩

셈부르크의 경우 GDP 대비 2.7%를 현금 급여 지원으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은 GDP 대비 0.2%만을 현금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EU 국가에서 가족 아동 지원 중 현금 급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키프로스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북구 유럽 국가에서는 EU 평균 수준에 못미치는 현금 급여를 하고 있으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은 매우 낮은 현금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4. EU 국가의 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

아동 보육과 관련해서는 보육 서비스 지원에

그림 3. EU 국가의 가족 및 아동 지원 현금 급여 비중(GDP 대비): 2005년



자료: ESSPROS(Eurostat), EC(2009)에서 재인용

대한 정부의 지출 이외에도 보육의 양과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아동 연령에 따른 보육 서비스 충족률,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 부모 본인 부담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 충족률도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국가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 국가에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2.3%), 스웨덴(1.9%), 핀란드(1.4%), 노르웨이(1.5%), 아이슬란드(1.8%), 프랑스(1.6%)로 대부분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다.

3~5세 유아의 보육 서비스 이용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7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경우 100%에 가까운 취원율을 보이고 있어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공보육이 완전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3~5세 유아에 비해 낮은 양상을 보여 3세

표 3. EU 국가의 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US \$ PPP, 명)

	보육 서비스 지출의 GDP 비중	정부의 아동 1인당 보육 지출: 0~2세	정부의 아동 1인당 보육 지출: 3~5세	보육 서비스 이용율: 0~2세	보육 서비스 이용율: 3~5세	아동 대 교사 비율: 0~2세	아동 대 교사 비율: 3~5세	보육서비스 본인 부담: 맞벌이	보육서비스 본인 부담: 흠벌이
덴마크	2.3	8,009	4,824	61.7	89.7	3.3	6.9	7.8	8.5
스웨덴	1.9	5,530	4,091	39.5	86.6	5.5	10.9	6.2	4.8
핀란드	1.4	4,186	4,069	22.4	46.1	4	12.7	7.2	4.1
노르웨이	1.5	6,085	3,895	43.7	85.1	-	-	7.7	6
아이슬란드	1.8	3,408	6,781	58.7	94.7	-	7.3	14.9	13.5
프랑스	1.6	4,009	4,744	28	100	5	18.8	11.3	8.8
오스트리아	0.6	3,251	6,205	6.6	74	8.7	14.7	14.9	9.3
독일	0.77	3,084	4,865	9	80.3	7.5	10.5	8.4	6.8
벨기에	0.9	1,900	4,663	33.6	99.6	7	15.6	4.2	3.5
네덜란드	0.9	2,025	5,497	29.5	70.2	5	20	11.5	3
룩셈부르크	0.9	3,554	-	14	72.3	5	14.3	5.7	4.8
아일랜드	0.3	1,430	-	15	68.2	3	10.3	29.2	51.7
영국	0.8	1,850	7,153	25.8	80.5	3	17.4	32.7	14.4
포르투갈	0.9	1,289	4,489	23.5	77.9	11	16.5	4.2	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OECD(2007), EC(2009)에서 재인용

이상 유아의 취원율이 100% 가까운 프랑스와 벨기에에도 0~2세 유아의 보육 시설 취원율은 각각 28%와 33.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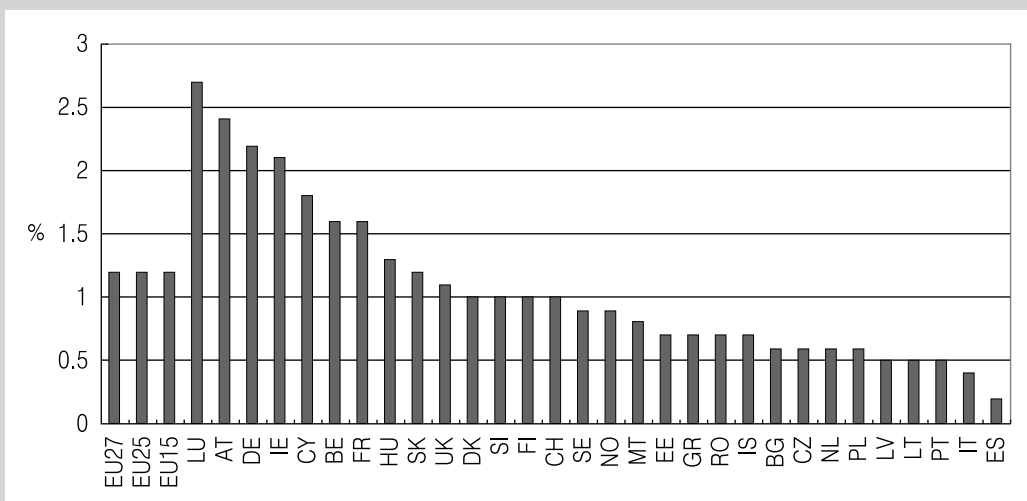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률도 맞벌이 경우 전체 비용의 10% 내외 만을 지출하고 있어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도 반일제에 해당하는 1~29 시간을 이용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 타임 근로 등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성이 많아 반일제로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5. EU 국가 양육 지원 정책의 시사점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과거 취약계층 가정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중심 정책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보편성 확대는 아동의 공공재로서의 특성 그리고 아동 양육을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본 고에서 고찰한 EU 국가의 양육 지원 정책의 현황에 근거하여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

그림 4. EU 국가 보육 서비스 지출 비중(GDP 대비): 2005년



자료: ESSPROS(Eurostat), EC(2009)에서 재인용

표 4. EU 국가에서 공공 보육 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국가	0~2세		3세~학령전		학령기~12세		의무교육기관 입학연령
	1~29시간	30시간 이상	1~29시간	30시간 이상	1~29시간	30시간 이상	
벨기에	23	19	49	48	43	54	6
체첸	2	0	30	40	53	45	6
덴마크	13	60	15	79	34	65	7
독일	8	8	61	26	69	29	6
에스토니아	3	9	9	69	57	40	7
아일랜드	14	6	64	14	64	35	6
그리스	3	4	27	34	54	45	6
스페인	25	14	54	40	53	46	6
프랑스	16	16	56	39	48	52	6
이태리	9	16	21	70	13	87	6
키프로스	7	12	42	43	54	46	6
라트비아	2	16	6	60	27	69	5
리투아니아	2	9	11	46	66	31	7
룩셈부르크	14	8	51	12	74	23	4
헝가리	2	5	30	49	30	70	5
몰타	5	0	32	23	19	79	5
네덜란드	36	4	82	7	89	11	5
오스트리아	4	0	53	16	66	32	6
폴란드	0	2	8	22	58	38	6
포르투갈	3	26	9	55	30	69	6
슬로베니아	2	22	10	67	41	55	6
슬로바키아	0	3	10	57	39	44	6
핀란드	8	19	25	51	82	18	7
스웨덴	22	31	35	52	1	95	7
영국	24	6	72	28	10	90	5
아이슬란드	7	30	21	76	22	77	6
노르웨이	11	22	28	52	83	17	6

자료: Eurostat, EU-SILC, 2005년, EC(2009)에서 재인용

직은 취약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성은 미흡한 경향이 강하다. 사회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아직도 전체 사회 정책 예산에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사회 예산은 총 86조 8,175억원으로 이중 보육·가족·여성 예산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육에 대한 지원이 보육·가족·여성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인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그 동안 재정 지출 규모에서 많은 증가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비교 대상 EU 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보육 서비스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가족 지원 정책은 현금 지원 정책, 가족 돌봄 휴가 정책,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 정책간의 보완적인 특성과 대체적인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 조합을 구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은 대부분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가족 정책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보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셋째, 보육료 지원 정책이 2011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됨으로써 어느 정도 보편성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보육 서비스 지원 외에 자녀 양육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지자체에서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축하금 혹은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도 대부분 셋째아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하여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러한 우선 순위 설정에 대한 전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이 약하다. 우리나라 가족 지원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취업 여성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럽 국가가 보육 서비스 지원의 목적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를 통하여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인 보육료 지원 정책은 여성의 취업 여부가 아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강화되었으나 소득 기준만 완화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 노동 부담을 경감하는데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종합컨대 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저출산이라는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가족 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세가지 지원 정책 - 현금 지원 정책, 서비스 지원 정책, 자녀 돌봄 휴가 지원 - 간의 최상의 조합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양육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사회 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